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

대전시 학교급식예산 50억 확보 급식지원센터 설치!

■ 일시 : 2007년 9월 5일 10:20

- ☐ 1. 전국학교급식 예산 및 재정자립도(2007년)
- ☐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 ☐ 3. 2007년 대통령선거 학교급식 관련 공약 제안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붙임1>

전국학교급식 예산 및 재정자립도(2007년)

순위	자치단체	예산액	재정자립도	자립도순위	비고
16	서울특별시	0	90.5	1	
15	대구광역시	3	63.9	6	
14	대전광역시	5	72.1	3	
13	울산광역시	6	68.4	5	
12	강원도	6	28.3	13	
11	충청북도	8	33.3	11	충주3억, 음성2억3천, 영동1억4천, 괴산1억3천
10	광주광역시	9	54.2	8	
9	부산광역시	12	62.9	7	
8	인천광역시	33	69.8	4	
7	제주도	35	26.4	14	
6	경상북도	40	28.9	12	
5	경상남도	87	39.1	10	
4	전라북도	100	23.5	15	
3	충청남도	105	36.9	9	
2	경기도	156	74.9	2	
1	전라남도	284	20.1	16	
		889			

* 학교급식예산에 특수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지원비는 제외됨.

학교급식지원센타

- 학교급식의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서의 -

지난 6.16(금)~7.4(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CJ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학교(총 33개교 2,829명)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총 48개교에서 3492명이라는 사상최대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수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더불어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학교급식운동의 중심과제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 보다 신토불이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 즉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먹인다는 것은 저질의 값싼 식재료로 제공된 학교급식을 먹고, 해마다 식중독사고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사전에 예방하여 미래사회의 건강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대도시의 시장으로 팔려나가고 다시 학교급식에 공급되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오는 대도시 도매시장의존 형태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 지역 순환형 경제시스템은 다국적기업, 대규모 농업관련 산업, 투기업자등의 이윤추구를 위해 식량조차도 세계 식량 체계로 재편 할려 는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농촌을 살려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급식운동 과제는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은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각 지역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 년에 한두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학교급식의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운동본부의 급식지원센터(안)

(1) 비영리적인 공익적 법인으로 독립

(2) 설립과 운영의 재원

○ 설립재원 :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 펀드로 해결(농림부의 유통지원 자금으로 해소 가능)

○ 운영재원

- 사무국의 운영비(사무국 직원 인건비, 일반 사무비, 활동비)는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로 해결(별도의 행정지원비 항목 개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장 운영비(현장직원 인건비, 경상비)는 40%는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 60%는 물류유통 수수료를 통해 자체 해결(복지관의 예를 적용)

(3)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조직

☐ 이사회

▶ 구성

-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자
- 기초자치 지역의 초중고 학교장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초중고 학부모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전교조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교총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 관련 단체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학교급식운동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시민운동단체 추천자

▶ 이사회의 역할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최고 의결기구

☐ 실무집행위원회(비상근)

▶ 구성

- 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지역 학교행정과장 3인
- 기초자치 지역 학부모 3인
- 기초자치 지역 영양사 3인
- 기초자치 지역 교사 3인
- 기초자치 지역 시민단체 1인
- 기초자치 지역 학교급식운동단체 1인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물관련 2인

▶ 역할

- 관련기구의 관련 실무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집행 보좌
- 필요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다.

- 가격선정위원회, 시장조사위원회, 안전위원회, 생산담당위원회, 교육위원회, 급식지원위원회, 공급위원회 등

□ 사무국(처)

▶ 사무국의 구성

-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에서 발탁한다.
- 사무국원은 공채를 통해 한다.

▶ 역할

- 상근자로서 이사회와 실무집행위원회의 역할을 보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상적 활동과 사업을 관리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과 위생 강화
- 식재료의 전처리
-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제시
-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 학생들의 생산체험 학습
-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업무

(5)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수급

-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단체(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의치 않는 것은 시장 구입을 다.
- 가공품은 생산자공장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식재료 배송

-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단체, 생산자 단체와 우선적 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 단, 필요에 따라 업자와 계약하여 공급한다.

(7) 공동지원센터 운영

- 재정, 학생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웃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부산지역의 사례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자·시민 물류 센터 설립 -

□ 필요성

- 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 생산자와 시민에 의한 협동운동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 도시형 지원센터의 모델의 형성 : 대도시에서 민간운동을 통해 지원센터 모델 만들기(생산자 확

보, 관과 정책적 공조, 학부모들의 참여)

- 지원센터 설립시 물적 인적 기반 조성 : 생산자의 조직, 지원센터 운영 역량 만들기, 전문인력 키우기등

□ 재정

- 시민모금을 통해 설립재원 마련(2억 목표)
- 정책자금을 신청하여 사업전개

□ 성격

- 비영립법인체

□ 운영

- 이사회를 구성(생산자와 시민의 1:1 구성)
- 품목별 위원회를 통한 생산단가 제시와 농업기술 발전
- 품질 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공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신뢰조성
- 지역위원회를 통해 각지역의 급식문제와 생산계획마련 : 거창, 김해, 거제등은 급식진행, 합천, 산청, 사천 준비중

□ 창고 및 사무실 마련

- 규모 : 60평(약 50개 학교 정도)
- 위치 : 부산 강성구 대저1동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방안 마련

지난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하고 그에 따른 급식비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생산자, 학부모의 거센 요구에 의해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의 안전성 점검, 식단,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급식교육, 급식정책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제정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계획은 이미 구체화 되어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나 생산자, 학부모에 의한 요구 뿐 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교육부와 농림부에 건의 사업을 수차례 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10월2일 강화군학교급식운동본부, 강화군청, 강화군의회, 강화군교육청의 공동주최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강화군에서는 12월 말까지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마무리하고 2007년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을 급식지원센터 명의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도시형 지원센터의 모델 형성, 지원센터 설립 시 생산자 조직, 지원센터 운영 역량 준비, 전문 인력 배양 등의 물

적·인적 기반조성을 위해 시민모금을 통한 물류지원센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 학교급식지원센타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 담아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타를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에 '둘 수 있다'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식재료비와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경감을 위해 지자체 내에는 협의 기구적 차원의 급식지원센타를 설립하고 유통과 물류는 기존 유통업체에게 위탁하는 급식지원센타 방안을 모색하거나 아예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학교급식지원센타는 기초 시·군·구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광역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에 둘 수 있다로 학교급식지원센타는 기초 시·군·구에만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도에도 각 기초자치단체간 조율을 위한 네트워크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초 시·군·구의 급식지원센타가 공급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관리감독 기능과 정책차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의 급식지원센타에 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부족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은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림부가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 친환경급식에 관한 61억원의 재정지원을 형편성의 논리를 내세워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학교급식법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4) 학교급식지원센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타는 직거래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타를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계획을 세울수 있고 학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학교간의 네

트위크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공성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업체여서 안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주체는 공공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생산자와 협력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시범운영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15일 감사원은 적극적인 학교급식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제공과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순천시를 모범사례로 널리 알리고 표창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단순히 표창과 모범사례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통해 몇몇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러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 학교급식 관련 공약 제안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으로”
학교급식 재정 지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새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한국가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한국여성농업중앙연합회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상 부문별 단체)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이상 지역별 본부)

문의: 전화 02-720-7029, 유병연집행위원장 (019-432-3132)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07년 대통령 선거 공약제안]

“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으로”

올바른 학교급식은 학부모의 정당한 요청입니다.

정부 학교급식 전담기구 설치

- 국무총리산하에 관계부처간협의기구로서의 학교급식위원회구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교육부 산하에 학교급식관련 전담부서 ‘학교급식과’ 설치

학교급식 예산 확대

- 질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학부모 부담
급식경비 100% 식재료비 사용
- 저소득층, 농산어촌학생에 대한 급식경비지원 즉각 실시
-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 정부공공비축미 학교급식 사용 지원 유지와
친환경 쌀 사용 시 50% 할인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확보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 GMO 농산물 등
안전성 논란 식품 사용금지
- 지역별 식품안전 검수시스템 도입
- 계절별, 지역별 표준식단 도입, 지역별 공동식단 실시
-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식생활교육추진법 도입
- 학교급식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2007년 대통령선거

학교급식 관련 공약 제안 설명

1. 대통령선거 공약 제안

1-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1) 07년 현재 전체학교의 99.6%인 10,986개교에서 744만명 급식
- 2) 직영급식 87.0%(9,556개교), 위탁 13.0%(1,430개교) 서울중고는 95%위탁
- 3) 학교급식 경비는 총 3조 4,577억원 소요('06년도 연간), 교육재정에서 21.8% 7,543억원), 학부모가 75.4%(2조 6,070억원) 부담, 식재료비 63.1%(2조 1,830억원), 인건비 24.5%(8,444억원), 연료비 7.4%(2,568억원), 시설비 5.0%(1,735억원) 등으로 사용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부모부담	후원금/기타	계
	7,543억원 (21.8%)	606억원 (1.8%)	2조 6,070억원 (75.4%)	358억원 (1.0%)	3조 4,577억원 (100%)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계
	1,735억원 (5.0%)	8,444억원 (24.5%)	2조 1,830억원 (63.1%)	2,568억원 (7.4%)	3조 4,577억원 (100%)

* 1인당 급식비(평균) : 초등학교생 1,700원, 중·고생 2,500원 정도(학교운영위원회결정)

- 4) 학교급식 종사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총 72,612명 배치
 - 신분별로는 정규직 15.2%(11,058명), 비정규직 84.8%(61,554명)
 - 영양(교)사 8,571명, 조리사 8,826명, 조리원 55,215명
- 5) '07년 현재, 저소득층자녀 579천명에게 급식비 2,060억원 지원
 ('05)468천명/1,448억원 → ('06)526천명/ 1,755억원 → ('07) 579천명/ 2,060억원
 전체 학생수(774만명) 대비 지원률 7.5% 수준 ('07.4월)

<참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예산지원현황>

1) 조례제정 현황(2006년 4월 말 현재, 교육부 자료)

-광역자치단체 16개 지역 : 시행 11개 지역

-기초자치단체 142개 지역 : 234개 기초단체 중 60.7% 제정 또는 추진

2) 예산지원현황

-지방정부 학교급식비지원(광역,기초포함) 2006년 3,784개교 56,334백만원

-중앙정부 지원 2006년 2,600억(쌀 679억, 우유 166억, 저소득 1,755억)

<문제점>

-잦은 식중독 사고 발생, 값싼 저질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 전가, 국가 지원 부족

-식재료 안정성 확보, 검수시스템, 유통구조 미흡

-위탁운영의 직영 전환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미비

-불투명한 학교급식운영, 학부모의 참여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 인식부족, 조례 미 제정

1-2. 정책 대안

1. 국무총리실, 교육부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부서) 설치

1) 국무총리산하에 관계부처간 협의기구로서의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 현재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조정과 협의를 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 학교급식에 관한 부처간 의견과 예산을 조정할 협의기구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과 학교급식을 담당할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지원, 식품 안전 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 확대 등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3) 교육부 산하에 학교급식관련 점담부서 '학교급식과' 설치

- 현재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교육부), 학교체육보건과(교육청)으로 급식담당 공무원은 2-3명정도로 매우 취약합니다.

- 학교급식업무만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 담당 공무원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2. 학교급식 예산 확대

- 1)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학부모 부담 급식경비 100% 식재료비로 사용**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100%를 식재료비로 사용하면 친환경급식 실시가 가능합니다.
- 2) **저소득층, 농산어촌학생에 대한 급식경비지원 즉각 실시**
 - 2011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저소득층학생 급식 지원은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을 전체 학생의 10%에서 20%로 확대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 3)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므로 의무교육기간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 4) **정부공공비축미 학교급식 사용 지원 유지와 친환경쌀 사용시에도 50%를 지원**
 - 친환경쌀의 학교급식 사용을 위해 정부공공비축미에 친환경쌀을 포함시키고 학교급식지원에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 1)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 2)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 GMO 농산물 등 안전성 논란 식품 사용금지**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 위험 논란 식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3) **지역별 식품안전 검수시스템 도입**
 - 학교별 검수 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 식품안전검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4) **계절별, 지역별 표준식단 도입, 지역별 공동식단 실시**
 - 지역별로 공동식단이 마련되어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식재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 5) **식생활교육추진법 도입**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추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6) **학교급식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
 - 학교급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 전담 부서 설치,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지자체 설치, 학부모 부담경비 100% 식재료비 사용,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소용 재정

- 학부모급식비 전액 식재료비 사용 4천2백억원 (시설비, 인건비 확대분 제외-교육부)
-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실시 20%로 확대 3천억원 (현 7.5% 2천억원 지원)
- 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 국고 지원 320억원(10억*16개 시도*2개소)
-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9천억원, 중학교 5천억원(5년간 단계적 실시)

<참고자료> 지난 2004년 국회의원,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각 당 급식 관련 공약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개정 -친환경적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무상급식 확대 ○ 매년 500억원 투입, 우리농산물 식자재 구입 지원 ○ 학교 급식체계의 개선, - 영양교사의 배치, - 급식관리체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대책위원회 내실화 -학교급식업무에 식약청의 제도적 참여방안 모색 -위탁업체의 비용부담 지양 시설지원 확대 통해 직영 급식으로 전환 -업체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학교급식 영업허가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개정 -위탁급식 폐지 직영전환 -단계적 무상급식 -안전한 국산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운영공개 학부모 참여보장 -학교급식전담기구신설 -유치원·보육원까지 급식 대상 확대

□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대통령 급식관련 공약

■ 학교급식 관련 전반 내용

△학교급식을 지속적 확대

△급식체계개선, 급식·영양교육의 강화,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내실화도모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하여 친환경적 우리농산물의 일정비율 이상의 의무사용을 법제화

△무상급식의 확대와 초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급식제공 방식의 실효성 확대와 위해 요소 중점 관리(HACCP)제 도입